

1.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발 의 자 : 김지만·김대현·김동식·김태원·김혜정·박갑상·송영한·  
윤영애·이만규·임태상·전경원·정천락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- 상정일자 :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년 11월 22일),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지만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대구시는 표창장, 감사장, 상장과 그 외 조례로 정한 17개 항목에 대해,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 247항목 1,022건,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 653항목 3,574건, 총 900항목 4,596건의 각종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음.
- 이러한 포상제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공을 기린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만큼, 포상의 당초 목적과 신뢰가

훼손되지 않도록 명백하고 정확한 포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행정의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함.

- 따라서, 포상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, 수상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각종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수여된 포상과 부상을 취소하거나,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적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남발을 방지하여 포상제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함.

#### □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

- 제31조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음.
- 포상 취소 대상으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, 포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공적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로 하였고,
-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,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, 시상격에 해당하는 상장은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곽영구)

#### ○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

- ▶ 대구광역시장의 포상을 받은 자에게 부적격 사실이 발생하거나 관련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미 수여된 포상을 취소하고 관련한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○ 조례안 개정의 배경은

- ▶ 국가 포상에 관한 법률인 「상훈법」 제8조1)에서는 서훈을 취소하고, 수여된 물품과 금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, 정부 각 기관에서의 표창에 관한 규정인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2)에서도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- ▶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·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·도에서 포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포상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과 경기도임.

※ 부산시는 2019. 9월, 경기도는 2019.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
## 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▶ 안 제31조에서는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포상을 받은 자의 △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, △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, △부정한 방법으로

- 1) 제8조(서훈의 취소 등)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,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(佩用)을 금지한다.
  1.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  2.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(敵對地域)으로 도피한 경우
  3. 「형법」(제115조·제117조·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), 「관세법」 및 「조세범 처벌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
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2) 제19조(표창의 취소)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시상을 받은 자가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.

공적서류를 작성·제출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수여된 표창장 등과 이와 관련한 패 또는 물건·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기 수상자에 대한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의 대상과 종류, 포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, 포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▶ 아울러 포상의 수여 과정에서도 포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포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**참 고****포상 발급 현황**

## ○ 민간인 포상 현황

구 분	2016	2017	2018	2019. 9.
표창장	2,320	2,305	2,206	1,097
감사장	33	127	94	85
상장	876	829	919	566
자랑스러운 시민상	5	6	6	—
자원봉사대상	3	3	3	—
산업평화대상	—	—	—	—
중소기업대상	6	6	6	—
에너지상	—	—	—	—
문화상	—	—	—	—
여성대상	2	1	1	1
청소년대상	—	—	—	—
건축상	7	7	7	—
이인성미술상	—	—	—	—
조경상	4	4	4	—
노인복지대상	—	—	—	—
창조경제대상	—	—	—	—
장애인대상	—	—	—	—
컬처아너스상	—	—	—	—
호국보훈대상	—	—	—	—

## ○ 공무원 포상 발급 현황

구 분	계	표창	상장	모범공무원
소계	3,287	2,340	887	60
2016년	986	691	275	20
2017년	985	717	248	20
2018년	1,001	718	263	20
2019년 (9월말 현재)	315	214	101	—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○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?		○ 현재 소급 적용은 불가함	

## 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